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인터뷰

- 일 시: 2026년 6월 24일 10:30~14:30
- 장 소: 기후변화센터 4층 회의실
- 면담자: 김병호 『외교』지 편집위원장
한동만 편집위원(한국외교협회 부회장)

최재철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그리고 최근 유엔에 제출한 2035년 NDC 목표는 53~61% 감축으로 매우 도전적으로 평가하였다. 최 이사장은 국회 행사 등에서 NDC 목표를 범위(range) 형태로 제안하고 최고치를 “금메달”, 최저치를 “메달권”으로 소개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였다고 소개하였다. 비정부 기구(NGO)인 기후변화센터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중견 관리자,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기후위기 대응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통한 구체적 실천을 촉진하는 플랫폼임을 강조한다.

최 이사장은 NDC 목표를 달성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으며 만병통치식의 왕도(王道)는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으로 첫째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黑貓白貓)론을--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면 이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이른바 “진보좌파”의 생각이든 “보수우파”의 생각이든--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 여건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은 정말 쉽지 않다고 한다. 둘째 애로(隘路)로는 한국의 전력시장과 전력망을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김대중 대통령이 전력시장의 한전 독점을 개혁하기 위해서 발전시장, 송·배전시장, 소비시장으로 점진 개방하기로 하고 IMF 위기 극복 과정에 발전 분야를 6개 회사로 분리하였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송·배전 시장 분리를 추진하

는 과정에 노조의 강력한 반대 시위에 부딪혔고 2004년 노사정의 권고로 송·배전 분리 방안을 중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노조를 비롯한 여러 진보 그룹이 반대하는 한미 FTA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가 적극 반대하는 송·배전 시장 분리까지 추진하는 것에 큰 정치적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10년에 걸쳐서 발전, 송·배전, 소비 시장을 단계적으로 분리 개방하여 오늘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전력시장은 아주 경직되어 있으며 한마디로 말해서 동맥경화증에 걸린 것과 유사하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지금 다시 6개 발전 회사를 한전과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공기업으로 통합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새로운 공룡 공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지역에서 소비)라는 용어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상징하고 있다. RE100을 위해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가 풍부한 호남에 반도체 산업을 배치한다는 방안인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원자력 및 LNG 발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정밀 산업에는 불량품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이 극복되어야 하고 전압의 안전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혁신적인 전력 솔루션이 필요하다.

최 이사장은 에너지 분야가 젊은 세대들의 창업이 활발해지는 스타트업의 무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 스타트업이 엄청나게 활발해질 수가 있어요.” 전력시장이 개방되어 창업이 활발한 사례로 덴마크의 에너지 자립으로 유명한 작은 섬 삼쇠섬 이야기를 하였다. “삼쇠섬은 여름철에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기가 남아돌아 전기 가격 마이너스 시장이 됩니다. 삼쇠섬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청년 창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전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여름 휴가철마다 청년 창업자들이 넘친다고 한다. 전력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건물 에너지 관리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예를 들어 청년 세대들이 건물 여러 채를 대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비용을 절약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관리회사를 창업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문자 그대로 그런 풀뿌리 에너지 관리 회사가 생길 수 없는 현실, “왜냐하면 법을 통해 전기 사업자가 되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탄소포집활용(CCUS)기술은 아직 초보 단계이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석탄화력발전소나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거나 저장(CCUS)하는 비용이 톤당 100달러 넘게 든다고 한다. 작년 2025년 오사카 만국박람회에서 대기중 탄소직접포집(Direct Air Capture: DAC) 기술을 시현하는 일본 산학 기관의 연구 프로젝트가 전시되었다. 대기에서 직접 탄소를 포집하는 시현을 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탄소를 포집하는 흡착제(adsorbents)라고 하는데, 흡착제를 통해 포집된 탄소는 고체화되어 콘크리트나 도로 포장제로 사용된다고 한다. 당시 DAC 프로젝트 담당자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에 DAC 설비를 배치하여 포집 비용을 줄임으로 수년 내 상용화하는 일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에너지 녹색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지 않겠다는 방침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오로지 재생에너지만 주장하는 일부 급진 그룹은 “CCUS란 돈 많이 들고 이른바 화석연료산업-발전소,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핑계 기술이라고 반대를 한다. 그래서 제가 흑묘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데에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 “탄소 중립 미래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철강 없이 갈 수가 있습니까? 또 건물을 시멘트 없이 지을 수가 있습니까? 또 의료 제품이나 식품 포장에 플라스틱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플라스틱 때문에 전 세계의 의약품과 식품 교역이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의류도 플라스틱과 같은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가에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가 취할 길을 최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약속)과 행동의 괴리에 있고 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를 강조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1시간을 넘는 사무실에서의 인터뷰의 미진한 부분은 오찬장으로 이어졌다. 중국이 썬샤(三峡)댐의 수력, 신장(新疆) 위구르 사막지대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RE)를 이용하여 유럽시장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장애를 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필요성, 그리고 주프랑스대사로서 BIE 2030 월드엑스포의 부산유치 활동의 비사도 소개했다. 오찬후 찻집에서의 대화는 외교부의 생활을 회상하는 기회였다.

다음은 『외교』지의 서면질문에 최 이사장의 서면 답변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최 이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센터가 미래세대와 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외교협회 회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였다.

Q1. 우선 먼저 기후변화센터의 성과와 주요 사업분야에 대해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비정부 기구로 2008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는 설립된 지 18년이 되어가는데 센터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그동안 주요 실적과 향후 중점을 둘 주요 사업 분야는 무엇인가요?

A: 기후변화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 전반의 대응 역량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왔습니다.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산업계, 학계,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 과제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주요 성과는 교육, 정책 플랫폼, 국제협력의 세 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 25기에 걸쳐 1,100명 이상의 기후 리더를 양성했으며, 정책 포럼과 연구 활동을 통해 기후·에너지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탄소중립 정책 지원, 지자체 협력, 산업계 전환, 국제협력, 미래세대 교육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Q2: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과 최근 유엔에 제출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53~61% 감축이라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정부가 의욕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2035 NDC를 작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그 과정에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정부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해 나가고 국제 NGO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센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A: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27.6%, OECD 평균 15.8%)이 높으며 폐쇄적 독점형 전력시장으로 인해 감축 목표 달성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목표의 의욕성뿐 아니라 실행 가능성, 산업 현장의 수용성, 국제경쟁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정부·산업계·학계·시민사회·언론을 연결하는 협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산업계에는 탄소중립을 규제 부담이 아닌 생존과 경쟁력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선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욕적이면서도 달성 가능한 NDC 이행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Q3: 그동안 기후변화센터는 각계각층의 리더급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 리더십과정 개최, 민관협력을 통한 기후환경 정책 발굴과 대안 모색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포럼의 개최, 지자체 탄소중립 활동 지원, 산업계와의 협력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국내외의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활동 무대를 넓혀왔습니다. 각각의 입장 차이가 존재할 때 갈등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센터의 리더십 전략은 무엇인가요?

A: 기후변화 이슈는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의제이지만 각국은 산업구조와 여건을 고려하여 논의에 참여합니다. 기후변화센터는 독자성을 지닌 비영리 민

간단체로서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정치적 독립성, 전문성, 국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실행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의 기후 거버넌스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해 탄소중립 정책 발굴과 실행 지원, 탄소시장 활성화, 기후기술 및 기후금융 확대, 국제협력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Q4: 2015년 파리협정 체결로 세계 모든 국가가 위기감을 갖고 기후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억제하겠다는 목표 달성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매년 높아지는 지구 평균기온과 잦아지는 기후 재난은 시급한 기후 행동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후 협약(파리협정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요?

A: 2025년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1.5℃ 목표 달성은 어렵지만 상승 예상 경로가 4℃에서 2.5~2.8℃로 내려왔는데 이는 파리협정의 긍정적 성과이기도 합니다. 다만, 폭염, 홍수, 산불, 가뭄 등 극단적 기후재난은 이미 일상화되고 있고 여기에 전쟁, 중동 분쟁, 미·중 갈등, 에너지 안보 불안, 공급망 재편까지 겹치며 기후위기는 환경을 넘어 외교·통상·산업·안보가 결합된 다층적 복합 위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후정책의 핵심은 정책의 지속성, 실행성, 경쟁력 제고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산업계,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함께 이행 가능한 탄소중립 로드맵을 정비하고 국내외에 이행 로드맵과 진전상황을 파리협정에 따라 제시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은 아니며 국민의 삶, 일자리, 산업경쟁력, 에너지 안보를 함께 지키면서 감축을 추진해야 하며, 국내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탄소시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기후정책은 국내 정책이자 동시에 외교적 함의를 지닌 정책이므로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중견국으로서 개발 경험, 산업화 경험, 에너지 전환 경험, 배출권 거래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와 실질적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Q5: 파리협정 이후 국내 기후정책과 제도는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행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와 데이터센터 확대는 무탄소 에너지와 전력망 전환을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자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정책·제도는 무엇이며, 한국의 ‘기후악당’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이미 제시된 목표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환·산업 부문 감축이 핵심인 만큼,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기후·에너지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장기 투자와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조정 및 이행 점검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AI와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원 확보와 전력망 인프라 확충이 시급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전력망 보강, 신규 건설, 전력시장 제도 개편, 입지·인허가 문제 해결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이 실제 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개발, 금융지원, 세제 혜택, 청정에너지 공급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도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중앙정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센터도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통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는 한국의 국제적 약속과 실제 이행 사이의 간극을 지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목표 제시를 넘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에너지 안보,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한 현실적 감축 경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고, 기업은 기술혁신과 투자로 응답해야 합니다. 결국 한국 기후정책의 과제는 국제적 책임과 국내 산업 현실과 경쟁력을 함께 반영하면서, 약속과 이행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Q6: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탄소 관세’인데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기업들이 협력업체(부품 공급사)에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면서, 국제 무역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A: 공급망 탄소규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제 무역의 필요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격과 품질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제품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과 사용 전력의 무탄소성(탄소발자국)이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을 단순한 외부 규제로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산업전환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발전여건, 토지 제약, 주민 수용성, 전력망 부족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AI와 데이터센터 확대까지 고려하면 전력 수요는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 수소 등 한국 여건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기후규제 대응을 비용이 아니라 미래 투자로 전환해야 하며, 저탄소 공정, 에너지 효율화, 전기화, 순환경제, 친환경 소재 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Q7: 한국에 본부가 있는 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와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기후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협력의 주요 핵심 과제인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을 위해 한국이 그린 분야 선도국이 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향은 무엇인가요?

A: 한국은 국제기구 유치국을 넘어 국제기구 활용국이 되어야 합니다.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과 녹색성장연구소(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의 본부가 한국에 있다는 것은 큰 자산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글로벌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과 민간 자본을 연결하며, 개도국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제협력은 온실가스 감축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개도국은 홍수, 가뭄, 식량, 물, 보건, 생계와 연결된 적응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한국도 적응 분야의 기술, 자원, 지방정부 협력 모델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와 기후재원 축소는 국제 기후협력에 분명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이후에도 다른 당사국들은 파리협정 이행규칙 마련을 계속 추진했으며 현재 미국의 불참 가운데서도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불편한 기후협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이미 산업경쟁력, 기술패권, 에너지 안보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만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단순한 후퇴가 아니라 새로운 협력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며 다자주의가 흔들릴수록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한국은 국익과 국력의 균형 속에서 기후외교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센터는 GCF, GGGI, 정부, 기업,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한국형 국제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Q8: 중동 전쟁은 전 세계 에너지 안보를 흔드는 동시에,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과 재생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각국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독립을 앞당기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화석연료 의존 문제를 고려할 때, 대체에너지 전환 전망과 기후변화센터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A: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 문제는 경제적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쟁력의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석유와 가스는 아직 세계 에너지 공급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중동 리스크, 해상 수송로, 유가 변동 등 외부여건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무탄소 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자립과 안보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의 단기, 중·장기적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되면 유가와 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해상 수송로 불안으로 에너지 수급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이는 물가, 산업 생산비용, 무역수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국의 에너지 안보전략이 자국과 우호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은 다자주의 후퇴와 일방주의에 기반한 각국의 실리 추구 및 인류 보편적 가치 후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자립, 공급망 재편, 전략산업 보호 강화로 작용하게 되고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국제 협력보다 자국 산업 보호와 에너지 안보가 우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센터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탄소중립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시키는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어야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뿐 아니라 무탄소 에너지와의 균형, 전력시장 개혁과 활성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Q9: 금년 여름이 유난히도 덥고 태풍과 장마가 더 잦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폭염, 폭우 등 심화되는 극한 기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사회적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AI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예측의 과학기술적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태풍이나 홍수 예방이 가능할까요?

A: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감축을 넘어 적응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태풍 등 극한기후는 예외적 재난이 아니라 일상적 위험이 되었기 때문에, 사후 복구 중심의 방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적응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별 기후위험을 반영한 맞춤형 적응정책과 취약계층 보호가 가장 시급합니다.

기후 적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감축이 미래 위험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적응은 이미 현실화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고령층,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기후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고, 실제 피해 감소와 회복력 강화로 이어지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AI 기반 기후예측 기술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AI는 폭염, 집중호우, 침수, 하천 범람 등 기후위험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예측해 조기경보와 재난대응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재난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데이터 구축과 지자체 현장 행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국가, 지방정부,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예측 결과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Q10: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비해 대중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에서, 세대 간 대화의 창을 열고 실천을 이끌어낼 소통·교육 전략은 무엇인가요? 또한 기후변화센터가 운영해 온 청년 기후·환경 플랫폼 ‘클리마투스 컬리지’의 주요 성과와 향후 방향은 무엇인가요?

A: 기후 대응의 성패는 기술과 정책뿐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를 추상적인 환경 문제가 아니라 폭염, 집중호우, 산업경쟁력, 에너지 비용 등 일상과 연결된 문제로 전달하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후를 경제, 산업, 기술, 금융, 외교와 연결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센터는 2012년 유세이버스(You Save the Earth, You Save Us)를 시작으로 2019년 클리마투스 컬리지로 확대 운영하며,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 100만 명 규모의 미래세대 참여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을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기후 전환의 파트너이자 변화의 주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간 졸업생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영향력 있는 학계, 산업, 창업 등 다양하게 진출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플라스틱 스쿨어택 등 청년 주도 프로젝트, 국제회의 참여,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 청년의 실천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AI, 에너지전환, 순환경제, 기후테크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청년과 기업·정부·학계·언론 리더를 연결하며, 기후변화센터를 미래세대와 사회를 잇는 기후 소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

